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63
----------	------

발의연월일 : 2020. 12. 1.

발 의 자 : 김미애 · 박성민 · 조명희
윤상현 · 황보승희 · 정경희
백종헌 · 이종성 · 권성동
조태용 · 전주혜 · 윤주경
강대식 · 안병길 · 윤두현
김영식 · 박수영 · 전봉민
최승재 · 강민국 · 허은아
서정숙 의원(22인)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

하지만 최근에 신생아가 베이비박스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바 있음.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 사회적 곤경 등을 이유로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사건은 1,272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

의 직접적 양육 책임을 넘어서서 국가는 곤경에 빠진 부모를 지원하고 안전한 영아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신부를 지원할 수 있는 책임 및 보호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시킴(안 제3조).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상담기관은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신부와 상담을 위하여 전화 등의 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신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상담기관의 장은 임신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신부의 산전·산

후 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상담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마친 임산부에 대하여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모의 정보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기관의 장에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사.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제2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자.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아동의 출생사실 등을 전달받은 상담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알려야 하며, 아동의 출생사실 등을 전달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상담기관의 장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차. 아동의 출생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아동의 성명,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

카. 보호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으며,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도록 하고, 다만 친모가 입양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모로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인수한 후 해당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출생증서의 작성으로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안 제11조제2항).

과.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1조제4항).

하.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의 철회도 이루어진 것으로 봄(안 제12조).

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친부는 「민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해 친양자 입양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너.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상담기관은 상담을 마친 산모에 대하여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4조).

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1항).

러. 출생증서 열람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의 열람을 허가하도록 하고 다만 친생

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출산”이란 임신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담기관”이란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의 친생부모 및 출생 당시의 정보를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신부에게 산전·산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임신부가 스스로 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우선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건강권과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보호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 등

제4조(상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기관은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와 상담을 위하여 전화 등의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담기관은 상담기관에 두는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호출산을 위한 상담) ①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및 「입양특례법」의 입양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의 의사를 밝힌 임신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과
2.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자녀의 권리
3. 친생부의 권리
4. 보호출산 이후 입양 절차
5. 보호출산 이후 친생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다시 행사하기 위한 방법과 기한
6. 보호출산으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 출생증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과 친생모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7.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구체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호출산의 지원 등

제6조(산전·산후 보호시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설을 보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 지정 및 변경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출생증서의 작성) ① 상담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마친 임산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모의 정보만 작성할 수 있다.

1.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3.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표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모의 가명, 상

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다.

제8조(보호출산의 지원) ①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기관의 장에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 ①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사실 등을 전달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사실 등을 전달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상담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출생증서의 영구보존)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아동의 성명,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했을 경우에는 동 출생증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 ① 보호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으며,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모가 입양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모로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인수한 후 해당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작성으로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아동의 입양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입양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제12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철회

한 경우에는 다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출산의 철회) ①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의 철회도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친생부와 인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친부는 「민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자녀를 인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해 친양자입양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출산 후 보호출산의 신청) ①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 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상담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출산의 의사 표시를 확인한 이후 지체 없이 해당 산모에게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을 마친 산모에 대하여 제7

조의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아동의 보호, 보호출산의 철회, 친생부의 인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출생증서 열람 청구) ① 이 법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입양특례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에 설치된 상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경비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신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9조

제1항에 따른 아동의 출생사실 등 통보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업무
수행 경비

3. 제10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영구보관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 경비

제17조(비밀유지의무) 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를 위
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